

新남북경협으로 '하나의 경제시장' 만들어 나가자

조봉현 |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겸 북한경제연구센터장 | chobh21@ibk.co.kr

북한경제 변화하고 있나?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경제 상황은 어떠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대북제재 강화로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있다. 구체적인 경제 지표가 없는 북한경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것 같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토대로 보면, 김정일 정권 17년간 북한경제는 연평균 0.2% 성장하였지만 김정은 정권 5년간은 연평균 1.2% 성장했다. 2016년에는 무려 3.9%까지 크게 성장했다. 물론 대북제재로 인해 2017년은 -3.5%로 급락한 것으로 나왔지만, 북한의 학자들은 김정은 정권 이후 경제가 연 7%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곤 한다.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겠지만, 건설 활기, 공장 가동률 상승, 농업 생산 증대, 장마당(유통) 활성화 등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현장을 살펴보면 경제가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경제의 성장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6.28 방침(2012년)과 5.30 조치(2014년)로 농업과 경공업에서 시장경제 요소가 도입되고 자율경영체제가 확대되는 등 시장경제 현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내세워 성과에 따른 생산물 분배, 즉 경제주체의 기술력과 능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장·기업소·협동단체의 생산조직에 일정한 자율경영권(생산·분배권 및 무역권)을 갖는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에서 시장화 현상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재와 중간생산재의 상당수를 장마당에서 거래할 정도로 장마당은 북한경제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마당

숫자는 급속히 증가하여 공식적으로 500개를 넘었고, 작은 비공식 장마당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가 5,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으로 장마당 숫자가 5만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들은 돈벌이(자영업) 붐이 일고 있다. ‘돈이면 최고’라고 인식하고 북한 주민의 80% 정도가 장사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북한에서 손전화(핸드폰)는 600만대나 보급됐고, 온라인 쇼핑몰(‘만물상’ 등) 또한 늘어나고 있다. 카드(‘고려’, ‘나래’, ‘전성’ 등)가 발급되고 온라인 상품 구매, 모바일 결제시스템 도입 등 금융에서도 시장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장마당 급증으로 인해 한국산 제품도 몰래 인기리에 유통되고 있다.

북한 내 신흥부유층인 돈주(錢主)는 북한 사금융의 주역이자 대형 프로젝트의 돈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돈주는 화교, 재일교포, 무역 외화벌이 일꾼, 밀수꾼, 장사꾼 등 그 주체가 다양하고, 북한 당·정·군 핵심 권력자들의 가족과 친척이 상당수다. 돈주는 초기에는 시장 울타리 내 무역, 환전, 고리대금업 등에 투자했으나 “기업소의 경영 자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빌리거나 주민유휴 화폐 자금을 동원 할 수 있다”라는 「기업소법」 개정(2014)으로 점차 대형 건설사업과 운수·관광 사업 등 주요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의 대외개방 조치의 일환으로 주요 지역에 경제특구 및 개발구를 조성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특구 정책은 종전과 상당히 다른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을 모방하여 특구를 중앙급·지방급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북한 경제특구는 중앙급 9개(김정일 5+김정은 4), 지방급 17개(김정은)이다. 강남경제개발구(2017)와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2013)를 포함할 경우 28개에 달한다. 또한 기존의 종합 특구가 아닌 각 지방 보유의 비교우위 요소를 기초로 공업·농업·관광·수출 등에 특화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특구 밖의 북한 기업과 거래를 허용하고, 특구 내 외국자본이 특구 밖 북한 기업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하지만 경제개발구 발표 이후 대북제재, 대북투자 리스크, 인프라 부족, 법 및 제도 미흡 등으로 실제 진행되는 곳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경제개발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다.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기본 정책 노선을 변경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 개발 병진노선에서 벗어나 경제개발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북한은 “경제 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16년 5월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다.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 보장, 에너지 문제 해결, 식량 자급자족, 중요자원 개발, 경제의 현대화 및 정보화로 지식경제 전환, 인민생활 향상 종사자 우대 등이 그 핵심 내용이다.

북한이 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민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북한은 2020년 경제 강국 진입을 목표로, 대북제재를 완화시키고 외자유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新남북경협 구상과 전망

북한 핵문제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면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과 공동 번영, 즉 남북 경제협력이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의한 대북제재 완화 수준에 따라 경제협력이 단계별로 추진될 전망이다.

남북경제협력의 문은 4.27 판문점선언 및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중심으로 서서히 열릴 것이다.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등 교통인프라 우선 구축,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9.14), 공동어로구역 설정, 산림녹화 및 환경협력, 의료보건 협력, 방역·방재 지원 등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대북제재 면제 등 여건이 마련되면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가 조성될 것이다.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서 큰 성과가 나오면, <한반도 新경제 구상>을 중심으로 新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한반도 新경제 구상은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하는 그랜드플랜이다.

한반도 新경제 구상은 3대 경제·평화벨트 구축(H빔 세계화 전략)과 '하나의 시장' 협력이 핵심이다. 환동해 경제벨트는 동해안권과 중국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복합물류, 관광, (신재생)에너지, 농수산식품, 자원 중심의 경제벨트이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금강산관광 재개, 금강산~원산 국제 관광지대 조성, 설악산~동해안~금강산~원산 관광벨트,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 나진항 신규 개발, 나선 경제특구 개발, 청진 산업단지 개발, 단천 자원벨트 조성, 안변 조선협력단지 조성, 농수축산 협력, 동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남북리 에너지 협력 및 동북아 에너지망 구축, 북한 지역 원유 탐사, 남북한~일본 환경 및 관광 제조업 벨트 조성, 동해선 연결~대륙철도 연계, 두만강 유역 남북중리 공동 개발, 두만강 유역 국제자유경제도시 건설, 해양자원 공동 이용(동해), 서울~백두산, 양양~백두산 남북 직항로 개설 등이 있다.

환서해 경제벨트는 남북한의 서해안과 중국 환보하이권(환발해권)을 중심으로 한 첨단 제조업과 물류 중심의 경제벨트이다. 주요 프로젝트에는 개성공단 재가동, 수도권 경제벨트(서

울·인천·경기~개성~평양·남포·해주, 경의선 철도·도로 개보수 및 확대, 서울~평양 고속도로 건설, 서울~베이징 고속교통망 건설, 한반도 통합철도망 협의체 구성, 서해평화협력 지대 조성(개성~해주권, 남포~평양권, 신의주권),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인천~연평도~해주~개성 개발, 평양, 남포 경제특구 조성, 신의주~중국 단둥과 연계한 부품산업벨트, 남북한 ICT 협력, 환서해 에너지망 구축(남·북·중·일·몽), 남·북·중 복합물류네트워크 추진, 환서해 항만도시 얼라이언스(alliance) 등이 있다.

접경지역 평화경제벨트는 DMZ, 한강하구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경제를 통한 평화안보 실현)하여 생태·환경·관광의 ‘녹색(Green)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북한 황폐지 조림 CDM사업과 연계, DMZ 재생 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소 건립, 통일경제특구 조성, DMZ 의료 및 생태관광 신산업벨트 구축, DMZ 내에 한반도 생태평화연구원과 기상관측소 설치, UN 산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체육대회 유치, 남북공동시장 개발(특산물 거래),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 인도적 차원의 초 국경 방역·방재 사업, 한강 하구 생태, 역사 관광 벨트 조성, 평화의 뱃길 개방(예성강~임진강~한강), 연륙교 연결(강화~개풍, 교동~해남리), 공동시장 개발(특산물 거래) 등이 있다.

‘하나의 시장’ 협력 구상

‘하나의 시장’ 협력은 남북간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상호 시장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북한 내부의 시장화 촉진을 겨냥한 무역확대와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북한 전역의 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북방경제로 시장을 확장하고 ‘시장’을 매개로 남북한 주민의 생활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재 및 생산요소 시장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하나의 시장협력’은 북한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에 활발하게 추진해 왔던 소비재 위탁가공 교역부터 재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남한에서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는 형태를 통해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시장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 골자이다.

주요 프로젝트에는 북한의 시장화 촉진 지원(장마당 현대화 등), 소비재 위탁가공, 생필품 공장에 기술·설비·원료 지원 협력, 소비재 생산단지를 북중, 북러 접경지역에 건설, 신의주 지역 및 나선 지역에 경공업 생산단지 조성, 남북 접경지역에 남북협력상품판매장 설치, 북한 자영업자와 우리 중소기업 시장협력, 중소기업 북한시장 투자지원 프로그램 마련, 생산재

시장 협력, 4차 산업혁명 공동 협력,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남북한 CEPA 체결, 남북 경제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가동 등이 있다 특히 국제기구 및 남북 연구기관(KDI 등)간 협력을 통해 북한의 자생적 경제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남북경제인력을 양성·교류하는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향후 추진 과제

대북제재 국면에서 '하나의 시장' 협력을 비롯한 한반도 新경제 구상 추진은 쉽지 않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여건을 개선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궁극적으로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新경제 구상은 비핵화 진전 상황, 여건 조성 등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는 전략이다. 단순한 대북정책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우리 경제의 미래 구상이고 정책이다. 정권에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한반도 新경제 구상이 가져올 기대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IBK경제연구소의 추정에 의하면, 이를 통해 한국은 매년 1.03%p 추가성장하여 연평균 4.03%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1인당 GDP는 2030년 5만달러를 달성하게 되며, 연평균 14만 5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왔다. 북한은 매년 10% 이상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1인당 GDP는 2030년에 5천달러가 될 수 있으며, 연평균 3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 개성공단 일자리의 6배의 효과가 예상된다. 나아가 한반도 新경제 구상 추진으로 남북한 경제가 통합되고 공동체로 나아가면 한반도 경제가 세계 3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남북이 하나의 경제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향적 행태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 이행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면서 대북제재를 풀어내고, 이를 통해 대규모 외자유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북한은 외자유치가 가능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국제관례와 기준이 적용되는 경제시스템을 갖추면 머지않은 시기에 놀라운 정도의 경제발전 성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끊어진 남북 경제의 맥을 다시 이어서 북방으로 경제지평을 넓히고, 하나의 경제시장을 형성하여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들어 가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의 성과를 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한편,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며, 新남북경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수립하여 가능한 사업부터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평화경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